

부정채용 늘고 사망자에도 배당금... 수협 방만경영 도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맹성규 의원 “임직원자녀·친인척 등 계약직→정규직 전환 비율 2.5배”

이기구 의원 “금융사기 매년 증가 모니터링 요원 확대 등 대책 필요”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매년 증가하는 채용비리와 금융사기, 사망자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합·조합원들의 관리 미비 실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임직원 자녀·친인척 계약직→정규직 전환율 2.5배

이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의 임직원 자녀·친인척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일반 계약직원보다 2.5배 높다”며 “특히 지역조합의 경우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역조합에 근무 중인 임직원 자녀는 41명, 친인척은 38명으로 총 79명이다 이들 중 계약직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입사한 자녀 및 친인척은 67명(77%)으로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평균 계약직 채용비율(68%) 보다 높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43%(29명)에 달해 지역조합 평균 전환비율(17%)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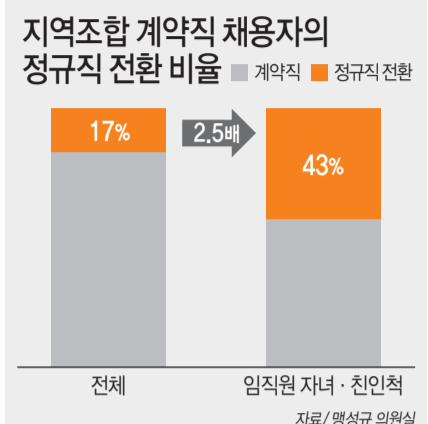
맹 의원은 “지역조합의 채용은 서류-필기-면접을 거치는 ‘고시채용’과 서류와 면접만으로 이뤄진 ‘전형태용’ 두 종류로 이뤄진다”며 “지역조합의 경우 전형태용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수협의 지역조합에 대

한 채용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3곳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지역조합은 필기 성적우수자를 탈락시키고, 임직원 관련자나 특정지역 출신자를 합격시켰다. B지역조합은 비상임 감사의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조정하고 지원자가 5명 있었는데도 지원자가 없으며 재공고를 통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C지역조합도 예정에 없던 인성평가를 실시해 인성점수를 높게 받은 조합장의 지인과 임직원 친인척 다수를 합격시켰다.

이경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급변까지만 전환고시를 보고, 앞으로



는 공채식(고시채용)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 3년간 급증... “FDS고도화 할 것”

수협은행의 매년 증가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은행의 금융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9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기는 총 682건으로 피해액은 56억47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0건(1억

9500만원)에서 2019년 97건(6억4200만원)으로 4.5배 증가했다. 대출사기 건수도 2017년 103건(6억4000만원)에서 2019년 288건(25억490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피해액은 대다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289억원이다. 이 중 수협은행의 피해금액은 122억원으로 수협은행이 36억원(30%), 지역수협이 86억원(70%)이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피해방지대책과 환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고령자와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이 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일부 노후화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도 “지역조합 현황을 확인해 개선작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무자격 조합원 실태파악, 신속정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만4644명에 달한다. 무자격 조합원은 ‘자격이 없는 자’가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 조합원이 504명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자격 조합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수협 조합원은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기구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은 지난해 5017명이다. 무자격조합원은 지난 2015년 5568명, 2016년 401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으로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

수협이 지난 5년간 이들에게 분배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 3069만원, 2019년 5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이다.

임 회장은 “현재 문제인식을 하고, 조합원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임준택, 수협서 344억 저리대출 ‘특혜논란’

(수협중앙회장)

김승남 의원, 취임 1년6개월만에 배우자·자녀 대표자인 업체 4곳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후 1년 6개월 만에 수협은행에서 무려 344억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도 어업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22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취임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업체들을 통해 수협은행으로부터 334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임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취임했다. 신용대출금 10억원까지 합하면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344억원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다.

대출을 받은 업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농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10억원) 등 4곳이다. 대출목적은 운전자금, 타행 대환 등이었으며, 수협은행은 임 회장에게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과 수산발전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이들 대출 금리가 일반 어업인이 받은 우대대출상품 금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현재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어업인 우대대출상품 금리는 어업경영자금대출 4.46%, 상호금융우대대출은 4.54%, 조합원생활안정자금대출 5.14% 등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형선망어업인 특화대출 17억 6000만원의 대출금은 금리 0.97%다. 수협은행의 어업인 우대 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다. 임 회장이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 업체를 담보로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 태풍 피해, 코로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정서와 괴리도 크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환매연기’ 급증

박광온 의원, 최근 10년 총 361건 작년 187건, 올 164건 등 사례 발생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으로 집계됐다. 환매 연기는 2011~2017년 0건, 2018년 10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 까지 164건의 환매연기가 발생했다.

금융권은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자 환매 연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등은 모두가 기간 동안 조성됐다.

문제는 이같은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원으로 추산했다. /나유리 기자

금융위 산하 8개 금융공기업 직원 36% ‘억대연봉’

산은, 억대연봉 58.8% ‘최대비율’ 기업銀, 임·직원 임금격차 3.6배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36%가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과 여타결제원은 기관장 연봉이 4억원을 초과했고, 억대 연봉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이었다. 직원과 임원진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3.6배 차이가 났다.

2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직원 2만3992명 중 36%(8724명)가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

(2019년 정규직, 임원진 평균 연봉)

(단위: 만원,%)

기관	정규직연봉(A)	임원진연봉(B)	정규직대비임원진연봉	차이(B-A)
중소기업은행	9673	34713	3.59배	25040
한국자산관리공사	6954	23909	3.44배	16955
한국예탁결제원	11074	34774	3.14배	23700
한국주택금융공사	7632	23398	3.06배	15766
한국산업은행	10692	32376	3.03배	21684
예금보험공사	8313	24048	2.89배	15735
신용보증기금	8955	24579	2.75배	15624
서민금융진흥원	4964	13288	2.68배	8324

자료=민형배의원실

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80%(6984명)는 연봉 1억~1억5000만원을 받았고, 19%(1678명)는 1억5000만원~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

관은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총원 3399명 중 58.8%(1999명)가 억대 연봉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51.9%, 신용보증기금 40.3%, 중소기업은행 33.3% 순이었다. /나유리 기자